

## 통일 독일에서의 의료통합에 관한 경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 옥 주

독일의 분단은 우리나라와 그 배경이 유사하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 승전국의 분할점령으로 시작되어, 1949년 소련 점령지의 사회주의 진영이던 동독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의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그 이후 서독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토대로 사회적 분배와 민주주의를 이루었으며 서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형성하였고, 동독은 전체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이루어 국가적 분배를 하며 동유럽권과 외교관계를 형성하였다. 1970년대 초반 동독과 서독의 관계 정상화이후 지속된 교류 끝에 1989년 베를린 장벽의 개방을 시작으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과 절차를 밟아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이 서독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에 흡수통합된 것이다. 보건의료제도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서독의 보건의료제도가 그대로 동독에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우선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법령정비는 1990년 7월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실현에 관한 조약’의 ‘제4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에 전체 사회보장체제를 통일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공공재정과 의료보험으로 운영되어 왔던 서독의 의료제도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본 조약의 21조에서는 동독 의료보험법을 서독의 의료보험법에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였다. 동독이 서독의 체계로 의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의료공급이 자본주의적 상품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민간 의료공급체제로서의 전환이 필수적이었다. 서독 병원의 합리화를 위해 1972년 도입하였던 병원재정조달법을 근간으로 동독의 병원 시설의 개선을 위해 1991년 4월 이 법을 재구성하였다. 통일 후 구 동독지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구 동독지역의 병원 현대화를 위해 ‘보건의료체제 구조개혁법’에 따라 1995년부터 10년간 매년 7억 DM의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다. 외래진료기관이 현대화되었으며, 암센터와 신장병환자에 대한 투석센터 등이 통일 전 구동독에서 낙후되었던 의료서비스가 현대화되었다. 개인 개업의의 수도 증가하여 340개였던 일반 개업의원이 1994년 말에는 22,000개소로 확대하였다. 통일 전 국가에서 계획 생산되어 분배되었던 구 동독 지역의 의약품 분야는 생산과 공급 및 분배의 자유화가 이루어져 기존 국영 의약품 공급 사무소와 국영 약국들이 민영화되었다. 통일 시점에서 동독의 의료체계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의 병원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였다.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통합과 정비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연간 5,000억 DM이며 구 동독지역 주민당 30,000 DM 이상 (1,800만원)이다. 구서독은 이로 인해 의료재원의 조달과정에서 커다란 보험재정의 적자를 겪게 된다. 독일의 경험은 남북한 보건의료의 통일을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점이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